

02 교육

고용노동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1

교육부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2016년 12월 5일

Before

신설

After



특수학급에도 직업교육실 설치,
필요한 인력, 경비지원

2

교육부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Before

신설

After



개인과외 교습시 표지부착 의무화,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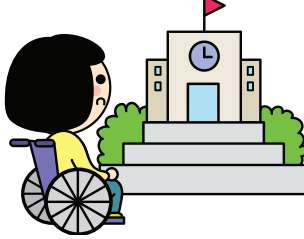
3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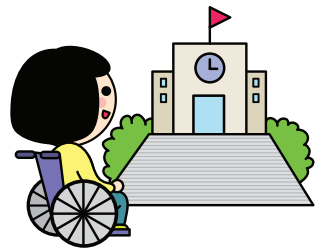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시행일 : 2016년 12월 5일

Before



After



4

교육부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80개교 운영

After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300개교 이상 운영 예정

5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Before

신설

After



1.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0)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합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융합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 우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융합SW(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시스템(스마트팩토리 실무)과정이 '17년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입니다.
-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2017년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에 직업훈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필요
- 주요내용
 - ①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하여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 훈련 종료 후 우수과정은 매뉴얼화하여 공개
 - ②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집중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훈련기관 공모, 2월~ 훈련생 모집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훈련 직종별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편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낮추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높여 취업성과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됩니다.
 -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기존 30%)로 확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2017년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 추진배경 취업성과와 훈련생 개인부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성과 직종 훈련 확대
- 주요내용 ①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 20~50%→5~80%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 : 0~30%→0~50%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를 반영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 2016년 현재 114개 직종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훈련실적이 없고, 성과가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핀테크,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을 새롭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또한, 그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비정기적으로 개편해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국가인력양성 협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개편 계획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 반영
- 주요내용
 - ① 훈련실적 및 성과 저조 직종 제외
 - ②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 포함
 -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정례화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1.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 교육부 | 교수학습평가지원팀 (☎ 044-203-7031)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연계하여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 학교급별 및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 절차, 채점 기준 및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방식을 보완하고 기재 예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교과별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등 과정중심 수행평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 훈령 개정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한다.
- ▶ 정보공시 강화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에 수행평가 시기 및 평가 내용(요소) 등을 포함하여 공개

창의교육 학생평가 시스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 주요내용 ① (현장 지원)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 절차, 채점 기준 및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과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보급
② (정보공시 강화)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에 세부 평가 내용(요소) 등을 포함하여 공개
- 시행일 2017년 3월

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 교육부 | 대학평가과 (☎ 044-203-6806)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 하였습니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확인하던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등에 더해 대학이 국제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적응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였고,
 -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학연수기관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국제학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학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전체 고등교육기관이 국제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추진배경**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 함으로써, 우수 국제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국제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제고
- **주요내용**
 - ① 평가대상 확대: 학부과정→ 학부과정+ 어학연수과정
 - ② 대학의 국제학생 생활 적응 및 학업지원 등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지표 추가
 - ③ 국제학생 불법체류율, 의료보험률 등 평가지표를 대학 실정에 맞게 개선
- **시행일** 2016년 9월

3.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 교육부 | 대학재정과 (☎ 044-203-6611)

2017년에는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국내 우수대학의 명품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입니다.
 - K-MOOC는 2015년부터 27개 강좌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0여개 강좌를 개설하여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또,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여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K-MOOC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K-MOOC 홈페이지(www.kmooc.kr)

K-MOOC 강좌확대 및 모바일앱 서비스 시작

- 추진배경 K-MOOC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욕구 부응 및 학습편의 제고
- 주요내용 - K-MOOC 신규강좌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강좌 확대
- 모바일 앱 개발 및 서비스 실시
- 시행일 2017년 1월 중

4.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89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제15조제1호가목)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하여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대학으로의 유학생 유치가 촉진되고,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국·내외 학위취득 및 외국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상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학점 인정범위 확대

- 추진배경 「고등교육법」 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 확대
- 주요내용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
- 시행일 2016년 10월 25일

5.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 교육부 | 이러닝과 (☎ 044-203-6421)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문대학만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업연한 단축 학교현장 착근을 위해 해당대학들이 이번 법령 개정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정사항이 학칙에 반영되는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소요기간도 단축됩니다.

[참고] 교육부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도입

- 추진배경 같은 학제 고등교육기관 간 동일기준 적용
※ 전문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가능,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불가
- 주요내용 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단축 불가→가능)
② 개정사항 학칙반영 협조 요청
- 시행일 2016년 10월

6.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 교육부 | 대학장학과 (☎ 044-203-6269)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 성적이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됩니다.

*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14년이후 입학자('93.1.1이후 출생자))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국가장학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 공표로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기별로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7.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16.11.17~12.13), 2차('17.2.27~3.9)

※ '17.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17.5월말~6월초), 2차('17년 8월말~9월초)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 추진배경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①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기초~소득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5만원)
 - ②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자체기준에 따름
 -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14년 이후 대학입학자 중 소득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단, '93.1.1이후 출생자에 한함) 대학생 대상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소득2분위 이하는 520만원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816)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교육감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 지원 등 인력과 경비 지원
-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044-203-6541)

2017년부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이 시행(‘17.2.4.)되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택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주변을 정비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 평가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평가서가 작성기준에 맞지않게 작성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확인한 결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금지 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의 교육환경보호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시행

- 추진배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 주요내용
 - 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장관, 5년 주기)/시행계획 수립(교육감, 매년)
 - 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 ③ 교육환경평가 대상 확대
 - 기존 정비사업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이상 건축행위 추가
 - ④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의 강화
 - 교육감의 승인내용 이행사항 조사·확인 및 필요 시 사후교육환경평가 요구
 - 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가능
 - ⑥ 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시행일 2017년 2월 4일

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81)

학점은행제 기관의 운영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15.3.27)에 따라 '16.9월부터 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학습자가 기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16.11.23부터 기관의 정보들을 통합하여 공개하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학점은행제 알리미', www.cbinfo.or.kr)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개통

- 추진배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
- 주요내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현황 등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가능
- 시행일 2016년 11월 23일

10.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 교육부 | 학원정책팀 (☎ 044-203-63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16.11.30.시행)으로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개인과외 운영의 투명성 및 학습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또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부착 표지 서식〉



- ▶ 재질 : 자율로 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
- ▶ 색깔 : 바탕-흰색, 글자-검정색
- ▶ 내용 : 우측 상단-신고번호, 정중앙-개인과외교습자 표시, 하단 중앙-교습과목
- ▶ 글자체 : 자율
- ▶ 글자비율 : '교육지원청 신고번호·개인과외교습자·교습과목'의 글자크기 비율은 13:24:13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부착 신설

- 추진배경 개인과외교습 운영의 투명성 및 학습자의 알 권리 강화
- 주요내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지 부착 의무 신설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11. 의무교육단계 학교밖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044-203-6453)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연령 도과 등으로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 2017년부터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비용도 지원하여, 학교밖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학교밖 학생이 교육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초·중 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2017년 시범사업(5개지역 내외)을 실시하여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거쳐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정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자료>학업 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방안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계획 추진

- 추진배경 학교밖 학생들이 언제·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교육감 직접 개설·위탁* 프로그램,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학습비용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에서 운영 중인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 프로그램(국제교육·종교교육 프로그램은 지정 불가)
②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취득 인정
- 시행일 2017년(시범사업) → 2018년(전국확대)

12.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907)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령정비를 하였습니다.

* '16.12월 중 시행 예정

-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 장애특성·유형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 면적을 정하는 학급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하여 교지 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 순회학급의 교지 기준 면적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특수학교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 추진배경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특성·유형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 시설 강화와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령 정비
- 주요내용
 - ①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 강화
 - ② 특수학교 교지 기준 면적 명확화(교지 기준 면적에 순회학급 제외)
 - ③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 적용 등
-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13.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 교육부 | 대학장학과 (☎ 044-203-6270)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차·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연장하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50% 감면하겠습니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장학재단법」 12%)을 연체구간별 3%p 인하(3개월 이하 10→7%, 3개월 초과 12→9%)하겠습니다.
- 아울러,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대출원금 30%와 이자를 면제하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연도별 운용수익 활용

- 한국장학재단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 지자체별로 재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을 원하는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45세까지 완화하여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강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 각 1회씩 추가 연장,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최대 2년간) 및 연체이자 50% 감면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35세→만45세)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4.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교육부 | 이러닝과 (☎ 044-203-6421)

2016년 10월부터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학교명칭 사용이 자율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대학교’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 추진배경 같은 학제 고등교육기관 간 동일기준 적용
- 주요내용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교’ 명칭도 사용 가능
- 시행일 2016년 10월

1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기준 완화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266)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 인구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학력인정 문해교육(중학교 과정)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 2016.8.4. 공포된 개정법령에 따라 대학졸업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고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농어촌 등 문해교육 소외지역의 교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 또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교원 양성을 위한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문해교육 교원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문해교육 활성화(문해교원 부족)
- 주요내용
 - ①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 자격기준 완화(교사자격증 소지자→대학졸업이상 학력 소지자 중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②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확대
- 시행일 2016년 8월 4일

16.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 교육부 | 공교육진흥과 (☎ 044-203-6715)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 2016년과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예정)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를 확대해나가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한 학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공교육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유학기제 홈페이지(www.ggoomggi.go.kr)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

- 추진배경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타학기·타학년으로 연계하여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 필요
- 주요내용 ①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중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하여 편성·운영
② 학교 구성원의 의지,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선정 예정
- 시행일 2017년 1월

17.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 교육부 | 진로교육정책과 (☎ 044-203-7037)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여 진로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인증을 통해
 -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참여를 유도하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 인증기관은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으며,
 - ‘꿈길’ 사이트 내 인증기관 탑재, 인증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 추진배경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처의 진로체험 제공 참여 촉진
- 신청대상 「진로교육법」 제19조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인증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기업, 개인사업자* 등
 - * 작가,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제외
- 시행일 2016년 8월 16일

18.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 교육부 | 교수학습평가지원팀 (☎ 044-203-7034)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되어 왔던 학생부를 상시 관찰과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재 예시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기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관련 연수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자료>교육부,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 등에 따른 학생부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 요구 증대
- 주요내용
 - ① 진로희망사항 : 학생 중심의 '진로희망' 과 '희망사유' 를 기재
 - ② 교과학습발달상황 : 수업 참여 태도와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과정 및 성취도를 중심으로 기록
 - ③ 독서활동상황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 중심으로 교사가 확인하여 기재
 - ④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의 변화와 성장 등을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기록
- 시행일 2017년 3월 1일(단, 명예졸업 관련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시행)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02-2100-6335)

부모교육 기반을 체계화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합니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과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및 연계하여 드립니다.
-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를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 *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족갈등 문제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20회기)하고, 생활환경 관리교육, 노무·법률·의료 상담 연계 및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
-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전국 1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참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9337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추진배경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어,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필요
- 주요내용
 - ①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
 - ②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 실시
 - ③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시행일 2017년 상반기

